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9

October 14,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9.)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u>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u> 9. 15.	• (이슈) 납품대금 연동제 • (주요내용)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정부와 참여기업이 적극적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
<u>공정위,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u> 9. 15.	• (이슈)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 (주요내용)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
<u>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개최</u> 9. 20.	• (이슈)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함
<u>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u> 9. 20.	• (이슈) 플랫폼 자율기구 • (주요내용)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됨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9. 21.	• (이슈)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인도 경쟁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공정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9. 26.	• (이슈)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 9. 26.부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9. 28.	• (이슈)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9. 29.부터 10. 21.까지 행정예고 - 10. 7.자 공정거래 뉴스레터 참조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에 고병희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임명 9. 28.	• (이슈)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 (주요내용) 대통령은 2022. 9. 28. 고병희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2022. 9. 28. ~ 2025. 9. 27.)으로 임명
신임 공정위 사무처장에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 임명 9. 28.	• (이슈) 공정위 사무처장 임명 • (주요내용) 대통령은 2022. 9. 28.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을 신임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임명
II. 주요 소식	
공정위, ‘조직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 신설 9. 9.	• (이슈) 조직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 • (주요내용) 공정위는 ‘조직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함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 기업 참여 저조 9. 11.	• (이슈)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 (주요내용)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 활용 수준이 저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신청 기업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공정위, 경쟁 제한 규제 완화 검토 9. 13.	• (이슈) 시장 경쟁 제한 규제 완화 검토 • (주요내용) 공정위가 사업자 허가·등록 요건 완화, 공적 독점 영역 축소, 영업규제 완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완화를 검토 중

이슈	주요 내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각 이코노미’ 종사자를 위한 보호 대책 마련 9. 16.	• (이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규제동향 • (주요내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각 이코노미’ 종사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담은 정책 성명을 발표
CVC 설립 증가에 따른 규제 완화 목소리 9. 16.	• (이슈) 지주회사 CVC 설립 • (주요내용) 지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지주회사 산하 CVC 설립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신임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교수 임명 9. 16.	• (이슈) 공정위원장 임명 • (주요내용) 대통령은 2022. 9. 16.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공정위원장(2022. 9. 16. ~ 2025. 9. 15.)으로 임명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사 발표 9. 16.	• (이슈)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동향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를 발표하며,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기 위한 향후 공정위 운영방안을 발표
정부, 식품업계 불공정행위 점검 예고 9. 19.	• (이슈) 식품업계 불공정행위 규제 • (주요내용)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힘
재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의견 표명 9. 19.	• (이슈) 공정거래법 동일인 친족범위 • (주요내용) 전경련 및 경총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보다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 방안 추진 9. 19.	• (이슈) 의무고발 요청 기한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 집단 규제 합리화 계획 9. 19.	• (이슈)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밝힘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추진 9. 21.	• (이슈) 플랫폼 자율 규제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플랫폼 자율 규제 도입을 계속 추진

이슈	주요 내용
한기정 공정위원장, 실효성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 강조 9. 26.	• (이슈) 플랫폼 자율 규제 • (주요내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공정위, 작년 평균 사건처리 기간 575일 기록 10. 4.	• (이슈)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 (주요내용) 공정위의 2021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575일로 분석됨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5년 새 급증 10. 4.	• (이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 관련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이 5년 전에 비해 8.6배로 급증
국회 정무위, 공정위의 동의의결 운영 비판 10. 5.	• (이슈) 공정위 동의의결 • (주요내용)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운영을 비판하는 질의 등장
내년 공시의무대상 동일인 친족 규모 급감 전망 10. 5.	• (이슈) 동일인 친족 규모 • (주요내용)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공시의무 대상 동일인 친족 규모가 절반 정도 감소될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추진 10. 5.	• (이슈) 공정위 조직개편 • (주요내용)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힘
공정위, 지난 4년 동안 과징금 3분의 1 환급 10. 6.	• (이슈) 과징금 환급 • (주요내용) 공정위가 지난 4년 동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패소하여 과징금의 3분의 1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됨
공정위, 납품단가연동제·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자율 규제 실행 10. 7.	• (이슈) 납품단가연동제·배달앱 수수료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는 납품단가연동제·배달앱 수수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율 규제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공정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규정 구체화 추진 10. 7.	• (이슈)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구체화 • (주요내용)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규정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을 밝힘

III. 국회 발의법안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김두관 의원안) 국회 제출</u> 9. 15.	• (이슈)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국토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안) 국회 제출</u> 9. 20.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9)

I. 보도자료

1.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9. 15.)

-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정부와 참여기업이 모두 적극적 역할을 맡기로 함
- 업무 협약에는 (i)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ii)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iii) 중기부와 공정위가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한편,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밝힘

2. 공정위,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 설명회 개최 (9. 15.)

-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설명회는 (i)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ii) 신고서 작성방법 및 과태료 부과 사례, (iii) 온라인 간이신고 시스템, (iv)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음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개최 (9. 2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였음
-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기업의 공정거래협약 도입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조정원은 공정거래협약 미도입 기업 중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가 다소 부담스럽거나 공정거래협약에 대한 관심을 이제 막 갖기 시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진행

4.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9. 20.)

-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되어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함
-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 축으로서, 플랫폼 소비자·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5. 공정위,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9. 21.)

- 공정위는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인도 경쟁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함
-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6. 공정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9. 26.)

- 공정위는 2022. 9. 26.부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시범운영
-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리점의 애로·고충 상담 및 처리)**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를 제공하고, 조정 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예방 및 완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예방 또는 원만한 해결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기간담회를 통해 중요 의견들을 공정위의 정책추진에 반영
 - **(대리점분야 상생협력 확산)**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의 확산 및 공급업자의 공정거래협약 참여 확대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현장실사 등 평가 업무를 지원
 - **(영세 대리점 대상 법률지원)**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
 - **(법 위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법 위반 및 불공정피해를 방지

7.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9. 28.) - 10. 7.자 뉴스레터 참조

-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9. 29. 부터 10. 21.까지 행정예고
- 이번 해석지침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법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됨
- 공정위는 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하여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개정 법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공동출자법인 요건,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함

8.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에 고병희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임명 (9. 28.)

- 대통령은 고병희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관을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2022. 9. 28. ~ 2025. 9. 27.)으로 임명
- 고 신임 상임위원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주립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으며,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역임함

9. 신임 공정위 사무처장에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 임명 (9. 28.)

- 대통령은 2022. 9. 28.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을 신임 공정위 사무처장에 임명
- 조 신임 사무처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역임

II. 주요 소식

1. 공정위, ‘조직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 신설 (9. 9.)

- 공정위는 과장급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조직선진화추진단’을 신설하여 공정위에 대한 외부 인식을 개선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법 집행을 위한 조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특히 조사와 심판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과 관련해 법원의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준사법 기관으로, 법 위반 혐의 조사는 사무처장(1급) 이하 실무 부서에서 하고 심의와 제재는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1급), 비상임위원 등 9명의 위원이 하는 구조임
 - 그러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실무 부서로 이어지는 조직체계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심의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추진단은 아울러 기업 조사 전담 조직 개편, 행정소송에 대비한 송무 기능 강화, 전속고발권 운용 합리화 등의 과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2.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기업 참여 저조 (9. 11.)

-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활용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CP 제도는 기업·기관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 준법 시스템을 운영하면 정부가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임
-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은 2006년 60개에서 2010년 44개, 2015년 15개, 2020년 7개, 2021년 10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공정위는 현재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는 CP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

3. 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완화 검토 (9. 13.)

- 공정위는 2022. 9. 13.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제한적 진입 규제·영업활동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 연구 과제는 (i)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ii)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 규제, (iii)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 규제를 20건 이상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공정위는 허가·등록요건 완화, 공적 독점 영역 축소 및 영업규제 개선 등을 통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혁신성장 동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밝힘

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각 이코노미’ 종사자를 위한 자체 보호 대책 마련 (9. 16.)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가 ‘각 이코노미’ 종사자를 위한 보호 대책을 담은 정책 성명을 발표하였음
- FTC는 ‘각 이코노미’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조건과 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행위를 벌이는 기업을 단속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i) 알고리즘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ii)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iii) 임금 담합, (iv) 독점으로 이어지는 인수 합병(M&A) 등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입할 예정임
- FTC는 위법 행위로 적발된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무부(DOJ), 노동관계위원회(NLRB) 등 다른 연방정부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5. CVC 설립 증가에 따른 규제 완화 목소리 (9. 16.)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지주회사 산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설립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CVC 안착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정위는 CVC가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 승계,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임
- 또한 공정위는,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CVC 설립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11월까지 기업들이 구체적 해석을 요구하거나 질의가 많았던 부분을 모아 메뉴얼을 배포할 예정으로 내년 CVC 운영 지원 및 성과 확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

6. 신임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교수 임명

- 대통령은 2022. 9. 16.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공정위 위원장(2022. 9. 16. ~ 2025. 9. 15.)에 임명함
- 한기정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200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였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을 거쳐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음

7.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사 발표 (9. 16.)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 16. 취임사를 발표하며,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기 위한 향후 공정위 운영방안을 발표
- 공정위원장은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의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경제 현실과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i) 독과점 등 경쟁 제한적 시장구조 개선, (ii)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 시책 연착륙, (iii) 중소기업·소비자 권익 향상, (iv) 조사·사건처리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

8. 정부, 식품업계 불공정행위 점검 예고 (9. 19.)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 부처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힘

9. 재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의견 표명 (9. 19.)

- 전경련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그 직계 존속’으로 축소하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였고, 경총 역시 해외 사례를 들며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밖에도 전경련은 (i) 친생자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ii) 사외이사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일괄 제외해야 하며, (iii)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10.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 방안 추진 (9. 19.)

- 공정위는 현재 중기부, 조달청과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공정위 제재가 끝난 뒤 6개월 이내로 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짐
- 다만, 중기부는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한 단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고,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정식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11.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계획 (9. 19.)

-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골자는 유지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i) 중복 공시 완화, (ii)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iii) 공정위 내 조사 기능과 심판 기능의 분리 (iv)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 (v)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등이 언급됨

12.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 추진 (9. 21.)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함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적이 있는 만큼,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것으로 기대됨

13. 한기정 공정위원장, 실효성 있는 플랫폼 자율규제 강조 (9. 26.)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가 플랫폼 입점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함을 강조하면서,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가지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 탈취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밝힘

14. 공정위, 작년 평균 사건처리 기간 575일 기록 (10. 4.)

- 공정위의 지난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약 1년 7개월(575일)로 밝혀짐
 - 공정위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17년 322일, 2018년 355일, 2019년 427일, 2020년 497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 관련하여 공정위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 대형 사건 전담팀 구성, (ii) 위원장 집무실 실시간 사건 현황판 설치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신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5.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5년 새 급증 (10. 4.)

- 2017년 대비 2021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14%(3,354건→2,894건) 감소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접수 건수는 오히려 8.6배(12건→103건) 증가
- 오픈마켓과 관련된 분쟁은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2년 8월 기준 81건 접수되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의 주를 이루었고, 불공정 약관·판매대금 미지급 사건도 문제되고 있음

16. 정무위, 공정위의 동의를결 운영 비판 (10. 5.)

- 국회 정무위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공정위가 동의를결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 국민의힘 소속 최승재 의원은 공정위가 동의를결 후 기업이 이행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지 않음으로써 동의를결 제도가 사실상 기업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비판

17. 내년 공시의무대상 동일인 친족 규모 급감 전망 (10. 5.)

-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동일인 친족의 규모가 올해 10,026명에서 내년 5,059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할 예정임
 -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의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동일인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친족을 원칙적으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대신 사실혼 배우자를 새롭게 포함시킴
 - 개정안에 따라 친족에 새롭게 포함되는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1인에 불과하나, 최상위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동일인의 혈족 및 인척이 대거 제외되어 친족 규모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18. 공정위, 조사·정책 기능 분리 추진 (10. 5.)

- 공정위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함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 16.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
- 공정위는 지난 9월 초 조직 선진화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구체적인 분리 수준과 형태 등은 향후 내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해외의 주요 경쟁당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힘

19. 공정위, 지난 4년 동안 과징금 3분의 1 환급 (10. 6.)

- 공정위가 지난 4년 동안 담합이나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패소 등으로 과징금의 3분의 1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됨
- 정무위 소속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취소 과징금과 환급 가산금을 포함해 총 3164억원을 환급하였음
-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파기되는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환급액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

20. 공정위, 납품단가연동제·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자율규제 실행 (10. 7.)

-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납품단가연동제·배달앱 수수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율 규제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자율 규제 진행 과정에서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에 고려할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법제화 전에 자율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또한 배달앱 수수료 및 중개료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정 수수료 수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함

21. 공정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규정 구체화 추진 (10. 8.)

-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름 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정밀한 성분비교 분석을 할 경우 기름은 성분이 서로 비슷하므로 필수품목으로 보는게 적절한지 질의함
- 공정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며,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고 답변함

III. 국회 발의법안

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김두관 의원안) 국회제출 (9. 15.)

- 국회 국토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자단체와 유사하게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개선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안 제41조의2 신설)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안) 국회 제출 (9. 20.)

-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은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의 임금, 자재대금 체불문제를 개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는(안 제14조의2 등)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